2026.05.06

그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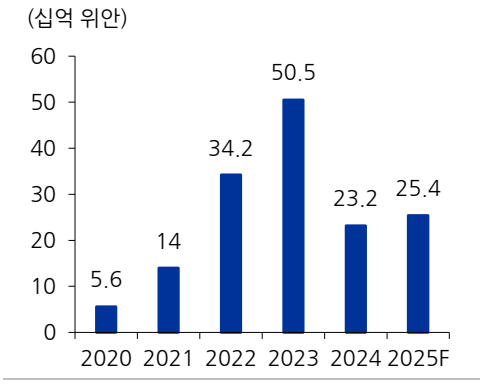
그린산업/ESG 한병화
bhh1026@eugenefn.com

유럽, 중국산 그린산업에 진입 장벽 쌓기
대한민국 그린산업 업체들에게 기회 제공

업종투자의견 **OVERW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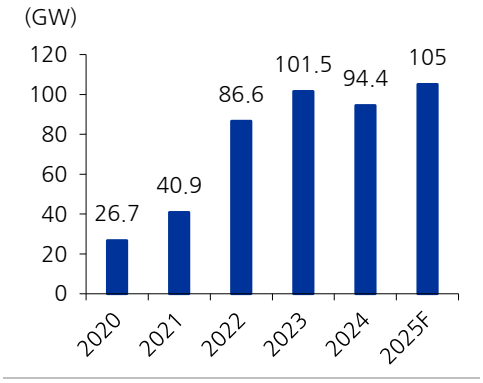
- **EU, 중국산 인버터 사실상 금지:** 전일 EU의 대변인은 중국을 안보 리스크와 관련된 고위험국이라는 이유로 중국산 인버터에 대해 EU 자금이 지원되는 신규 프로젝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이는 인버터에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는 기능이 탑재되기 때문에, 중국산 인버터는 EU의 전력망에 사이버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킨다는 주장. 중국의 유럽 인버터 수출은 2020년 56억 위안에서 2023년 505억 위안으로 급증한 뒤 2025년에도 254억 위안으로 유럽 전체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번 조치 확정되면 Sungrow, Huawei 등 중국업체들은 피해를 보고 유럽의 SMA Solar, Fronius International 등이 수혜를 볼 것. 한국과 일본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가능성 높아
- **영국 정부, 중국의 해상풍력 터빈 공장 설립 금지:** 지난 달 영국 정부는 중국 해상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밍양의 스코틀랜드 공장 건설을 불허함. 중국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이어온 노동당 정부여서 의외의 결정. 영국의 해상풍력 시장이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이고 중국업체가 진입하게 되면 가장 큰 전력 인프라에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한 때문. 해상풍력은 유럽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진입을 허용해서 산업 피해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 **전기차/배터리 산업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고용 인원이 전 산업에서 가장 많고, 전기차는 향후 자율 주행차로 전환되면 쌓이는 데이터 자체가 안보 문제로 직결. 따라서 중국산의 역내 진입에 대한 장벽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역내에서 중국업체들이 생산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이 동반. EU의 산업가속화법이 이에 해당
- **대한민국업체들에게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기회 요인으로:** 대한민국의 태양광, 풍력, 전기차/배터리, 전력 인프라업체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에 직접 진출해서 중국업체들을 대체해가는 초기 과정에 진입. 유럽과 미국은 자체적인 제조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 방향. 관련 국내업체들 전반의 중장기 성장이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

중국의 유럽향 태양광 인버터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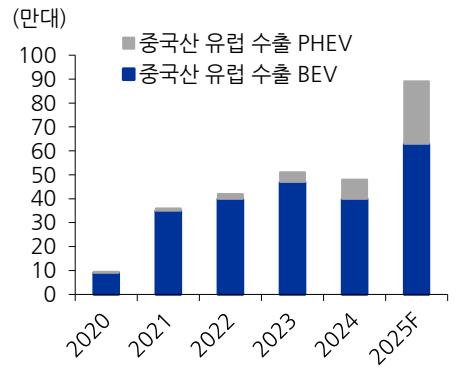
자료: 해관총서, 유진투자증권

중국의 유럽향 태양광 패널 수출



자료: PV Magazine, 유진투자증권

중국산 전기차 유럽 수출량 추정치



자료: CPCA, CAAM,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도표 1. EU 산업 가속화 법안(IAA) 핵심 조항

EU 산업 가속화 법안(IAA) 내용 상세		
법안 목표 및 대상	제조업 비중 확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24년 14.3% → 2035년까지 20% 달성 목표
	고용 목표	전략 산업 내 15만 개의 신규 고숙련 일자리 창출 및 자동차 산업 60만 개 일자리 손실 방지
	법안 검토	발효 3년 후 첫 평가 수행, 5년 후 공식 검토 조항(Review Clause) 적용
전략적 섹터 및 적용 범위	에너지 집약 산업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 등
	넷제로(Net-Zero) 기술	배터리, 태양광, 풍력, 열펌프, 전력망, 수소, 원자력 등
	모빌리티	전기차(EV) 및 주요 전자 제어 시스템
'Made in EU' 및 공공 조달 요건	부품 현지화 비율	전기차(EV) 보조금 수혜 및 공공 조달 혜택을 위해 부품 및 소재의 최소 70%를 EU 내에서 생산해야 함
	저탄소 기준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및 EU 배출권 거래제(ETS)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 강도(GHG Intensity)' 라벨링 적용
	입찰 우선순위	공공 입찰(EU 경제의 14% 규모) 시 'Union Origin(유럽산)' 및 'Low-carbon(저탄소)' 요건 충족 여부를 낙찰 기준의 핵심 요소로 산입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제 조건	규제 대상	**분야:** 배터리, EV, 태양광, 핵심 원자재 **기준:** 해당 품목의 글로벌 생산 능력 40% 이상을 점유한 국가의 기업 **규모:** 1억 유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4대 법적 이행 조건	**1) 현지 고용:** 전체 인력의 최소 50% 이상을 EU 노동자로 채용 **2) 지분 구조:** 외국인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 (EU 측이 과반 지분 및 의사결정권 보유) **3) 기술 관리:** EU 내로의 기술 이전 및 실질적인 연구개발(R&D) 활동 수행 **4) 공급망 귀속:** 유럽 내 가치 사슬(Value-chain)과의 물리적·경제적 통합 증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단일 창구	'유럽 비즈니스 월렛'을 통한 원스톱 디지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산업 가속화 구역 (IAA Areas)	구역 내 프로젝트는 개별 인허가 대신 '구역 전체 인허가(Area-wide permit)' 활용 가능 중간 단계 절차에서 무응답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승인(Tacit approval)' 적용 환경 영향 평가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법정 기한	인허가 검토 및 최종 결정에 대한 엄격한 마감 기한 설정으로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
	행정 비용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연간 행정 비용은 EU 전체 기준 최대 892만 유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모니터링 및 보고 비용)
통상 및 FTA 관련 규정	상호주의 원칙	FTA 체결국(한국 등)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EU' 인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공 조달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는 예외/우대 조항 명시
	FDI 심사 완화	특정 안보 리스크가 없는 FTA 체결국 기업에 대해서는 FDI 조건의 일부 완화 가능성 포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3.31 기준)